

당국 “3차 접종 효과 3개월 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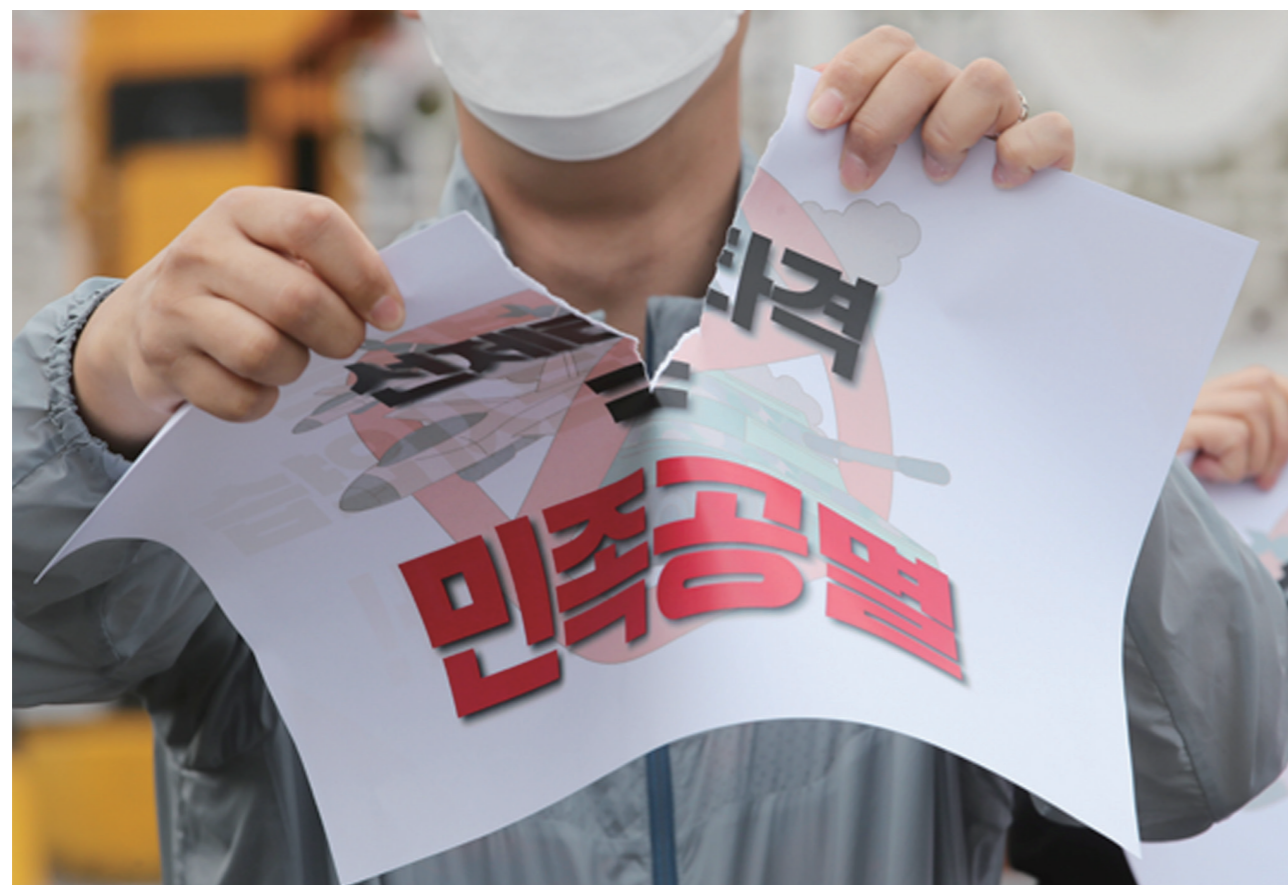
“완전히 감염예방 못해도 중증·사망 예방효과 명백”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검토...오늘 계획 발표”

방역 당국은 12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왕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3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에 “감염 예방효과는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감소될 수 있고, 6개월 정도 후에

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계절독감(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과 중증도가 높은 만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는 감염 예방과 중증·사망 예방 세 가지 정도”라며 “비록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완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 하

더라도 상당한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의 위협성을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더 전파력과 중증도가 높다”며 “현재까지 수차례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비슷한 중증도나 치명률을 보인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중증도나 치명률은 높은 상

황”이라고 부연했다. 당국은 오는 13일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대해 어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내일 오후 2시30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연습 금지 퍼포먼스

전국민중행동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집단면역 도달’ 첫 언급 “야외마스크 해제 검토”

“거리두기 완화하고 일상 회복 시도할 시기”

정부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 처음 언급했다. 야외 마스크 착용지침 해제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앞으로 아주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단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우리 사회가 접종률과 자연 면역 획득 인구를 합해 집단면역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아마 다시 큰 유행들로 변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서 “이번 거리두기에서 마스크도 포함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생업 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광범위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라고 했다. 이왕선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실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며 “현재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전하게 실외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정도로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외에서는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 또는 집회 참여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일상 회복’을 시사하면서도 향후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

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단장은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면역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항상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변이는 중요 변이가 아니다”라며 “현재의 확진자 감소세나 거리두기에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변화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집회 인원 제한이 완화될지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상 회복 이후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고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각종 방역수칙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보리농사 짓겠다” 제주 토지구입 경상도 교사 벌금

법원 “토지 매입 경위, 부정농지취득으로 판단”

타 지역에 거주하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제주도내 토지를 구입한 혐의를 받은 50대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취득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타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2017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토지 435㎡를 매입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는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리를 재배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지어 차익을 남기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들인 경위와 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의 정도를 보면 부정농지취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농촌 인구 증가 고령화 심각 수준

농촌 인구가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농촌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21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도 231만4000명에 비해 4.3%(9만9000명) 줄어든 것으로 5년 전인 2017년 242만2000명보다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농가는 103만1000가구로 전년보다 4.4%(4000가구) 하락했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감소했다. 연령별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이 72만명 전체 농가 인구의 32.5%를 차지했다. 농가 인구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60대는 66만1000명(29.9%), 50대 37만3000명(16.8%) 순이다. 60세 이상이 138만1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62.4%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농가 인구는 증가했지만 50대 이하 모든 연령에서는 감소했다. 20세 미만 미성년 인구는 13만2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6%에 불과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6.8%로 전년 대비 4.5%p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농가 인구 고령화 추세로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44만1000가구(42.7%)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35만7000가구(34.6%), 50대는 17만5000가구(17.0%) 등이다.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로 전체 농가의 56.8%를 차지했다. 평균 가구원수는 2.1명이다. 전업농가가 60만3000가구(58.4%)로 겸업농가 42만9000가구(41.6%) 보다 많았다.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는 75만5000가구(73.2%), 3ha 이상 농가는 7만5000가구(7.3%), 5ha 이상은 3만6000가구(3.5%)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3.9%에 불과했다. 판매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 농가는 63.9%에 달했다. 지난해 어가는 4만3000가구, 어가 인구는 9만4000명이다. 어촌 전입과 전업 등으로 전년 대비 어가는 200가구(0.4%) 증가한 반면, 어가 인구는 3300명(-3.4%) 줄었다. 연령별 어가 인구는 60대가 3만1000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2만4000명(25.6%), 50대 1만7000명(18.1%) 순이다. 전년 대비 70세 이상(10.8%), 60대(4.3%)는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서는 감소했다. 어가 역시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이다. 김재환기자



영암군·영암경찰,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영암군은 지난 5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광양경찰서·여수광양항만공사, 다압면 심진마을 CCTV 설치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1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와 다압면 심진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자위방범 CCTV 설치 기념식을 가졌다.

광양=심종섭기자



완도해경, 지역축제 맞아 도서지역 치안현장 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전남 완도 지역 대표축제(청산도 슬로걷기)의 성공적 개최와 제반 안전관리를 위해 청산도 일원에서 지휘관 치안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완도소방, 봄철 대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현장지도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봄철 소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까지 관내 대형공사장을 방문,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지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해양경찰교육원, 깨끗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 나서

강인한 해양경찰의 꿈을 키워가는 해양경찰교육원 학생들이 깨끗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에 앞장서기 위해 연안 정화 활동에 나섰다.

최이슬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백암, 셋길 집중관리 체계 도입

국립공원공단 내장산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가 본격적인 산행철 도래에 맞춰 셋길출입에 따른 산불, 자원유출, 조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셋길 집중관리 체계에 도입하였다.

김재환기자